
**2월 2-3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2016.02.19.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차례

1. 정부행정 (정미나) | 1

고위공무원 민간기업 근무, 대기업 27곳으로 가장 많아 ... '교류'인가 '유착'인가

2. 과학기술 (고광용) | 4

R&D실패 서울대에 연구비 14억 환수 판결... 실패의 수용과 자산화 필요

3. 정치 (박철한) | 7

새누리당의 기득권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거구 확정

4. 여론동향 (심은정) | 10

I 해외 - 버니 샌더스, 美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주자 `올킬`

II 국내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극과극 반응 나타나..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편집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 ❖ 문의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

1. 정부행정

○고위공무원 민간기업 근무, 대기업 27곳으로 가장 많아 ... '교류'인가 '유착'인가

- 인사혁신처는 올해 '민간근무휴직제' 시행 기업과 대상 공무원을 확정발표 했음. 대상 기업 및 단체는 총 51곳이며 대상 공무원은 57명으로 역대 최다임. 근무 기업 중 52.9% 가 대기업으로 삼성(8명), 현대 (6명), SK(4명), LG·KT(3명), 두산(2명) 등. 이들 공무원 직급은 3~5급이며 4급이 가장 많고, 최장 3년간 근무할 수 있음. 가령, 기재부 공무원 8명의 경우 현대해상, 현대차, KT&G, 두산, SK 하이닉스, GS 칼텍스, 쉘리드, 삼성증권에 부장급으로 근무하게 되며, 금융위 소속 과장 4명은 IBK투자증권, 삼성경제연구소, 교보생명, 코리안리재보험으로 발령받아 이미 근무를 시작했음.
-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에 도입됐지만, 고액연봉·민관유착 등의 문제로 2008~2011년까지 시행이 중단된 바 있음. 그러다 2012년 연봉제한 등 제도개선을 거쳐 다시 시행했으나, 대상 공무원 수는 5명 안팎에 그쳤음. 이는 제도를 재개하면서 민관유착 등에 대한 부작용으로 대상기업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고 선발인원도 제한했기 때문.
- 하지만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민간과의 순환인사를 통한 역량제고를 강조하며 대상자를 9.5배 확대하고, 대상 기업 역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함. 또한 근무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림으로써 지원자가 대폭 확대됐음.
- 물론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우려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복직 후 휴직기간 만음 의무복부, 휴직 전 3년 동안 소속부서와 업무관련 기관 제외, 복직 후 2년 동안 민간근무 관련부서 배치 금지 등의 방지조치를 강조함,
- 하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인력할당제'라는 비판이 제기됨
- 실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공무원의 자격조건뿐만 아니라 최종선발 권한까지

지 기업이 갖고 있음. 또한 원칙적으로는 68개 민간근무휴직 직위가 43개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이지만, 실제로는 핵심부 처 40대 과장급에 집중돼 있음. 올해 교류대상 공무원의 소속 부처는 기재부가 가장 많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이 다수를 차지함. 그리고 이들은 최대 3년간 계약할 수 있지만, 대부분 1년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상황.

- 이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시장감시국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시장감시국 소속 과장 3명 중 2명이 조사대상 대기업에서 근무하게 됨.
- 한편, 기업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슈퍼 울트라 갑’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월급도 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결국 대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눈치보기를 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은 향후 이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년 정도 간보기를 하는 상황. 기업 입장에서는 길어야 3년, 대체로 1년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고위 공무원은 로비스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당의 입장 및 대응

- 현재 인사혁신처가 확대추진하고 있는 민간근무휴직제는 기존에 중단된바 있는 제도임. 이는 이것이 본래 목적인 관료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민관유착의 폐해가 더욱 많이 드러났기 때문. 민간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기업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정책을 만들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지만, 이를 반드시 민간기업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는 방식으로 달성해야 하는지는 의문. 4급 정도의 공무원 개인이 민간 기업에서의 업무를 통해 정부관료로서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료사회 전반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 정부관료와 기업은 존재이유가 서로 다른 목적에 있음.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감시하며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기업의 기술과 시장에서의 입장변화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공무원 개인을 기업에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개인의 진로와 경력을 위해 활용할 유인이 더욱 큰 제도라고 여겨짐. 이런 맥락에서 민간근무휴직제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2. 과학기술

○ R&D실패 서울대에 연구비 14억 환수 판결... 실패의 수용과 자산화 필요

▶ 연구개발 실패한 서울대에 정부출연금 326억원 중 14억원(4.4%) 환수 판결

-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양수산부가 연구기간 10년에 연구비 326.8억원 규모로 발주한 신약 R&D사업을 수주했음. 이 R&D사업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대사성 질환, 면역·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 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하여 2013년 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였음.
- 2011년 중간평가에서 ‘연구단 구성체계 불명확’, ‘결과 작성 시 데이터 누락’ 등이 이유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됐음. 서울대는 2012년 심층평가에서 60.7점을 받았고, 연구목표가 ‘2개 이상 기술이전’으로 완화됐음에도, 2013년, 57.67점으로 ‘실패’판정을 받았음. 이에 따라 해수부(해양과학기술진흥원)는 관련법에 따라 연구지원금 중 14억원(4.4%)을 환수조치 했고,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 2년’ 처분을 했음.
- 이에 반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수부(장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했으나, 2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음. 재판부의 판단은 10년간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받고도 신약 물질의 기술이전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며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음.

▶ 과학기술기본법 상 국가 출연·보조 사업비 환수조치 적법하나 바람직한가?

- 해수부는 관련 법을 근거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 제한 처분조치를 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5년(재적발시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 R&D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사업비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①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소관부처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 과제로 결정,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②R&D내용 국내외 누설·유출, ③과제수행 포기시 ④기술료 미납부 등 총 8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사실상, 과학기술기본법을 볼 때, 해수부는 관련 법에 따라 평가절차를 걸쳐 연구자 R&D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조치를 적법하게 한 것이며, 서울행정법원 판결 또한 문제가 없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법이 장래 한국의 과학기술 R&D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정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닌 단지 연구개발 결과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뿐임.
- R&D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시급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지만, 열심히 했어도 실패하는 '성실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할 경우, 바람직한 R&D 연구환경 조성에는 영향을 끼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임.

☞ 당의 입장 및 대응

▶ R&D사업의 고유 특성은 불확실성과 성패 판단기준 모호성... 연구개발 책무성 전체 도전적·모험적 연구의 실패용인 연구환경 조성 필요.

- R&D사업이 타 정부사업과 다른 고유한 특성은 불확실성, 성패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임. R&D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한 성패 판단은 시점이나 평가주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즉, 도전적·모험적 연구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법으로 실질적 과학기술 R&D 혁신, 노벨상급 창의적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세계적으로 높은 R&D 역량을 가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모두 공히 가지고 있는

국가R&D 투자 및 연구 풍토는 도전적·모험적 과제에 대해 실패를 용인한다는 원칙임. 그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 노벨상급 연구가 나온 것임.

-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온정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은 아님. 다른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R&D사업은 특히 연구개발의 책무성(accountability)(투명성(transparency)+책임성(responsibility))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미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서 1항 2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나름 엄격히 진행되고 있음. 연구과정과 비용지출 내역 공개 등 불투명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한 처벌이 지속되어야 함. 그러나 책임성 확보 차원으로 규정된 제11조의2 1항 1조의 적용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실패의 자산화!... 건전한 실패 허용하되, 연구과정과 실패·성과의 면밀한 정리 및 공개, 전문가 평가 절차 마련

- 건전한 연구개발 실패 허용과 동시에 실패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자산화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을 면밀히 정리·공개하게 해야 함. 즉, 건전한 연구개발에 한해, 실패에 따른 연구비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어떻게, 왜 실패했는지, 향후 연구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연구책임자에 추가적인 연구지원금 없이 2개월 이내 기간을 부여하여 추가적으로 정리·공개하게 하고, 이 결과들을 전문가들에게 설명·발표하고 면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함.

▶ 중대형-장기연구사업 선정부실... 선정 핵심전문가의 역량강화와 숙의 필요

- 아무리 건전한 연구개발을 했더라도, 도전적 중대형-장기연구 역량을 제대로 검증·선정했는지 문제는 남음. 현재 대부분의 선정과정이 단기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소관부처 입장이 개입된 채 결정되기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해외 선진국들의 숙의의 정성평가(peer review)제도가 필요함. 첫째, 중점분야 세계수준 핵심전문가 교육·해외연수 통한 질적 선정역량 제고, 둘째, 담당관료 개입 최소화 전제 검증·선정과정에 숙의시간이 요구됨.

3. 정치

○ 새누리당의 기득권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거구 획정

- 선거구 미획정의 무법천지가 50여일에 이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자기의 기득권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음. 한마디로 선거구 획정 자체가 만신창이가 되었음.
- 2월 18일(목)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4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 그럼에도 결론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253석으로 확대하는 정치 대개약으로 양당의 입장이 좁혀져 있는 상황.

○ 친박-비박, 공천을 둘러싼 내홍 격화

-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의 사활을 건 공천 투쟁이 진행되고 있음. 이홍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최대 51개 지역구 우선 추천'을 표명한 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절대 불가를 외치며 정면 충돌.
- 현재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한 각 선거구별 후보인지도조사를 바탕으로 2월 25일(목) 결선후보 컷오프를 진행할 예정임. 또한 이날 새누리당 총선 출마 후보로 확정된 1차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 3월 중순까지 모든 지역구 출마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임.
- 1차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는 시점까지 새누리당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임. 전략공천 카드를 통해 '새누리당의 진박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친박계와 이를 허용할 경우 총선 출마는 커녕 친박계의 들러리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비박계의 간의 밀릴 수 없는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음.

○ 더민주 안정화 국면, 국민의당 컨벤션 효과 종료

-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권행사로 더민주는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빠르게 안정화 되었음.
- 반면 국민의당은 동교동계와 더민주 호남 탈당파, 서울의 김한길 의원 등 비주류, 안철수 의원과 그 측근 등의 구성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질성, 여전한 안철수 의원의 불안정한 리더십, 당의 노선을 둘러싼 불협화음, 교섭단체 구성 실패 등이 겹치면서 초기 안철수 의원 탈당과 창당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기대가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음.
- 초기 20%의 지지도가 반도막 난 상황임.
- 물론 지난 2월 17일(수) 이상돈 교수의 영입, 정동영 전 장관 영입, 더민주 하위 20%의 컷오프 의원들의 영입으로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호남에서 더민주와 대등한 정당지지율 경쟁 외에 다른 지역의 경우, 처참한 2~3%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국민의당은 2월 내에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저조한 정당지지율 상태로 전략할 수 있음.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호남 지역주의에 편승한 세력으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 당의 입장과 대응

- 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칠 정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겪는 최대 위기 국면이 공직후보자 확정과정임. 특히 지난 시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은 한 정당을 넘어 진보 세력 전체에 파급되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음.
- 또한 당은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는 의제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정책과 공약이 한국의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의 영향으로 인물경쟁만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무상의

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제시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대안 제시가 유권자의 지지결집을 유도한 경험이 있음. 휘발성 있는 공약의 제시, 의제의 선택과 집중, 다양한 방식의 포퍼먼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유권자의 표심을 두드려야 할 것임.

4. 여론동향

I. 해외 여론동향

○ 2016, 미국 대선

▶ 버니 샌더스, 美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주자 `올킬`

-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
- 19일(한국시간) 퀴니피악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10~15일 조사) 결과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 주자 도널드 트럼프와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48%대 42%로 우위를 보였고, 다른 공화당 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상대를 모두 제친 것으로 나타남.
-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에게는 49%대 39%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에게는 47%대 41%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됨.
-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의 대결에서는 45%대 41%로,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대결에서는 49%대 39%로 승리했음.
- 또한 샌더스 의원은 선호도 조사에서도 5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하였음. 이어 루비오 의원 39%, 클린턴 전 장관·트럼프·부시 전 주지사 각 37%, 크루즈 의원 36%, 케이식 주지사 35% 등의 순서로 집계됨.
-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한 공화당 주요 후보들에게 모두 지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네바다 주, 클린턴 지지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나...

- 민주당의 네바다 코커스(20일 개최)를 사흘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의 견고한 네바다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008년 네바다 코커스에서 51%의 득표율로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45%)를 수 치로는 이겨놓고도 복잡한 대의원 산정 규칙 때문에 더 많은 대의원을 오바마에게 양보하면서 쓰라린 패배를 겪은 바 있음.
- 또한, 클린턴은 뉴햄프셔에서의 고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서는 오히려 일찍부터 네바다 유권자 표심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봄 클린턴 캠프가 네바다에서 코커스를 본격 준비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클린턴은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견되었음.
-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네바다로 눈길을 돌린 샌더스는 약 3개월 만에 기금마련행사를 통해 모은 자원을 대대적으로 쏟아 부으며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 하고 있음.
- 이어, 지난 12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클린턴과 샌더스의 지지율이 45%로 동률을 나타냈음. 이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50% 지지율로 샌더스 의원(27%)을 두 배 가까운 격차로 따돌렸던 것과 비교해 불과 한 달여 만에 급격한 변화로 볼 수 있음.
- 이에, 최근 클린턴 캠프 측은 네바다에서 앞서 열린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와 마찬가지로 백인 유권자가 많아 샌더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함.

▶ 미국 대선, 기득권과 젊은 층의 대결로 볼 수 있나...

- 오는 20일(현지시간)에 예정된 네바다 중 코커스(당원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보수 웹진인 워싱턴 프리비컨과 여론조사기관인 타켓포인트마케팅의 여론조사(8~10일조사, 표본오차는 $\pm 2.9\%$) 결과, 클린턴과 샌더스는 45%로 동률을 기록함.
- 샌더스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공약들을 거침없이 내세우며, 공립대학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공짜'라는 타이틀을 걸며 젊은 층의 소액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그(샌더스)의 시각은 1930년대의 자유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1930년의 경제위기

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 층의 사고방식과도 잘 부합한다”고 분석하였음. 다시말해, 현대 사회가 1930년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 20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

- 이와 관련하여,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대선은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이와는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는 가장 큰 지지기반인 ‘기득권층’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사우스캐롤리나 예비선거, 클린턴 이기나..

- 오는 27일 사우스 캐롤리나에서 열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CNN/ ORC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6%의 지지를 얻었으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의원은 38%의 지지를 받음. 다만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56%는 여전히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함.
- 지난 10월 CNN이 단행한 사우스캐롤리나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49%에 지지를 얻었고 샌더스는 18%의 지지를 얻었던 것을 비교하면, 샌더스의 지지율이 같은 기간 내에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사우스캐롤리나는 클린턴 전 장관이 샌더스 상원의원보다 경제, 외교, 총기류 관련 사안에 대해 더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경제·이민개혁·안보 정책은 클린턴보단 트럼프 신뢰...

-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 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민개혁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클린턴 보다 높게 나왔다.
- 미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11일, 14일 조사,

표본오차 $\pm 3\%$ p) 결과에서 응답자의 48%는 경제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클린턴 보다는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함. 클린턴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9%,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4%로 나타남.

- 같은 조사에서 이민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49%가 트럼프, 38%가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나타남. 국가 안보 문제 역시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클린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두 사람의 격차는 지난해 9월 조사 때보다 좁혀짐.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6%, 클린턴이 4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 44%, 클린턴 43%로 나타난 것.
- 낙태, 동성결혼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클린턴을 더 신뢰한다'는 답이 44%,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는 답은 38%로 나타남.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클린턴에 대한 신뢰도가 46%인 반면,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침.
-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은 남성 응답자 경우 환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들은 이민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클린턴을 더 신뢰해 명백한 남녀 간 차이를 나타냄.

○ 페루 대선 여론조사, 케이코 후지모리 부동의 1위 차지...

- 현지 여론조사 업체 GfK페루에 따르면 케이코 후지모리는 2월 1일 기준으로 32.6%의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뒤이어 사업가이자 국회의원 출신인 세사르 아쿠냐 페랄타가 10%,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재정장관이 9.5%의 지지율로 각각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음.
- 최근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며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한 홀리오 구스만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마 금지를 당한 상태임.
- 4월10일로 예정된 대선에서 후보 한 명이 50% 이상을 득표하면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개월 후인 6월 1·2위 후보가 다시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결정하게 됨.
- 그러나 케이코 후지모리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지난 해 12월부터 꾸준히 30% 정도로 나타나, 4월 페루 대선에서 후지모리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

도 6월 열리는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됨.

II. 국내 여론동향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극과극 반응 나타나...

▶ 국민 3명 중 2명 '공감'...새누리당 지지층 94.0%, 더민주당 12.8%

-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과 관련하여 설문조사(표본오차 $\pm 3.0\%p$, 신뢰수준 95%)를 진행한 결과, 국민 3명 중 2명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입장과 향후의 대북관계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국민 3명중 2명은 박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은 94.0%가 “공감한다”는 의견인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지지층은 86.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남.
- 더불어,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752명을 대상으로 16일 공감 여부를 조사(표본오차 $\pm 3.6\%p$, 신뢰수준 95%)한 결과, ‘공감한다(매우 공감 42.7%, 공감하는 편 23.6%)’는 응답이 66.3%로 나타남. 반면, 박 대통령 국회연설에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비공감 21.9%, 비공감하는 편 10.5%)’는 응답은 32.4%로 나타나 ‘공감한다’는 의견이 두 배를 넘었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2·16국회연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부산·경남·울산(공감 75.8% vs 비공감 23.3%)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72.9% vs 27.1%), 대구·경북(69.7% vs 27.8%), 수도권(63.1% vs 35.3%), 광주·전라(55.7% vs 43.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공감 87.0% vs 비공감 11.6%)에서 공감 응답이 90%에 가까웠고, 50대(77.3% vs 20.9%)에서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20대(공감 61.1% vs 비공감 36.1%), 40대(56.3% vs 43.7%) 순으로 공감 의견이 우세함. 반면, 30대(공감 37.8% vs 61.4%)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공감 94.0% vs 비공감 5.6%)에서는 공감 응답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고, 국민의당 지지층(60.1% vs 39.9%)과 무당층(58.6% vs 29.7%)에서도 공감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남.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지지층(공감 12.8% vs 비공감 86.9%)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공감 83.7% vs 비공감 16.0%)에서는 공감 응답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중도층(64.5% vs 33.5%)에서도 공감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난 반면, 진보층(공감 30.8% vs 비공감 67.7%)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대다수임.

▶ 성과 낮은 직원 해고에 찬성 48%, 반대 42%...

-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국회 처리를 호소해 온 파견법 개정안(중장년 일자리법)에 대해 국민 중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매일경제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18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에 따르면, 파견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63.5%에 달해 반대 의견(25.7%)보다 높게 조사됨.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안에 대해 여론의 과반 이상이 친대기업적 편향정책으로 공감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임.
- 이와 관련하여,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1주일 기준)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70.5%)이 반대 의견(23.1%)보다 월등하게 높음.

○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2.2%(▼0.7%p), 부정 51.0%(▲0.5%p)

- 리얼미터가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2월 3주차 주중집계(15~17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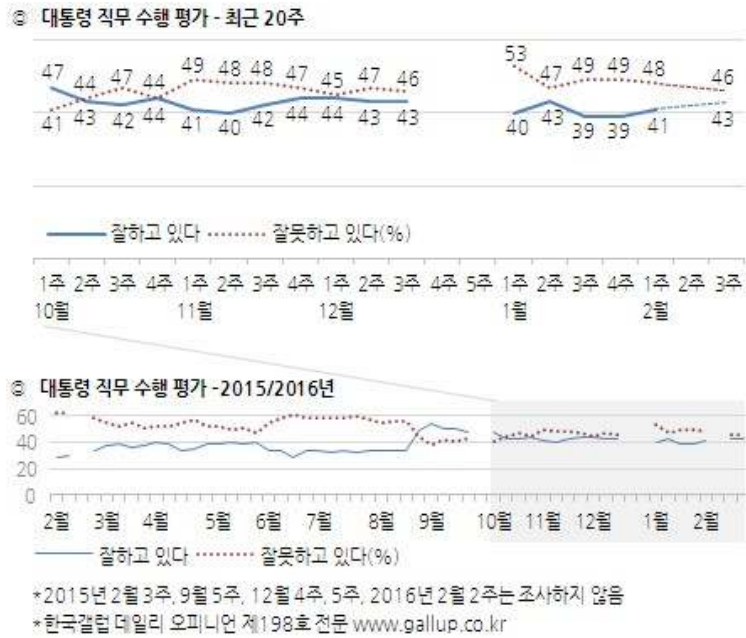
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에서 2월 2주차 주간집계(10~12일) 결과대비 2월 2주차 주간집계(10~12일) 3.2%p 오른 45.4%(매우 잘함 16.4%, 잘하는 편 29.0%),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하락한 49.8%(매우 잘못함 33.7%, 잘못하는 편 16.1%)로 집계됨.



출처: 리얼미터

-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돼 설 연휴와 이후 벌어졌던 남북의 초강경 맞대응과 파국 사태로 인해, 충청권, 50대 이상, 중도층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했으나,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40대 이하, 진보·보수층에서는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갤럽에서 2월 3주차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를 조사한 결과, 43%는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함.
-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직전 조사인 2월 첫째 주에 비해 2%p 상승했고 부정률은 2%p 하락함. 긍·부정률이 모두 40% 중반에 가까워지며 격차 폭이 3%p로 줄어들음.
- 각 세대별로는 긍정/부정률은 20대 14%/71%, 30대 27%/64%, 40대 33%/54%, 50대 55%/36%, 60대+ 77%/15%로 나타남.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3명)은 7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1명)과 국민의당 지지층(96명)에서는 각각 83%, 74%가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음(긍정 24%, 부정 51%).



출처: 한국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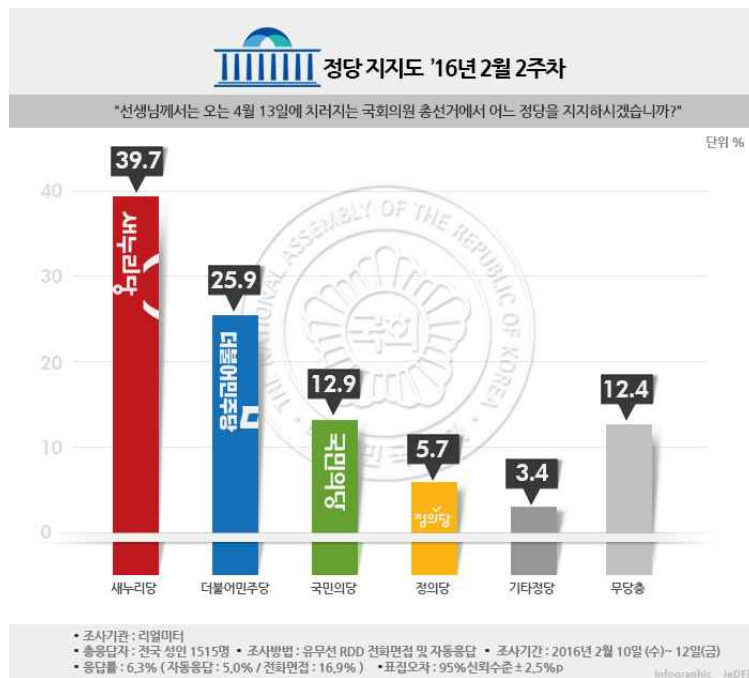
- 특히, 이번 주의 가장 큰 특징은 직무 긍·부정률 자체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은 반면,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안보 정책'이 크게 부각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응답이 추가된 것임. 이는 최근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기존 지지층은 크게 호응했으나, 비지지층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당지지도

-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월 3주차 주중집계(15~17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에서 새누리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5%p 하락한 39.7%로 3주 만에 다시 30%대로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1.1%p 하락한 25.9%로 20%대 중반으로 떨어짐. 국민의당 또한 2.1%p 하락한 12.9%로 작년 12월 3주차부터 정당지지도 조사

에 포함된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로 떨어짐.

- 이어 정의당이 1주일 전 대비 1.3%p 상승한 5.7%, 기타 정당이 0.1%p 하락한 3.4%로 집계됨.
- 이번 2월 3주차 정당지지도는 주요 3당의 하락과 무당층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변화는 설 연휴와 직후 연이어 벌어진 남북의 초강경 맞대응과 파국 사태,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여야 간 정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출처: 리얼미터

◎ 주요 정당 지지도 - 최근 20주



출처: 한국갤럽

- 한편, 한국갤럽에서 2월 3주차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0%, 정의당 2%, 없음/의견유보 26%다. 직전 조사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변함 없었고, 새누리당은 3%p 상승,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p, 1%p 하락하였음.
- 야권 관심 지역인 광주/전라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지도는 1월 셋째 주 32%-26%, 넷째 주 29%-25%, 2월 첫째 주 26%-30%, 셋째 주 35%-23%로 앞치락뒤치락한 반면, 정의당은 전국적 정당지지율보다 높은 5%의 지지율을 보였음.